

“산정호수, 이렇게 매력적일 줄이야”

사려니숲 체험행사기간 한시적 개방... 탐방객 목적 “신비롭고 아름다워... 식생 복원돼 정상 개방 기원” 팬데믹 시대 마음과 몸 치유하는 명상도 ‘시선몰이’

제주의 360여개 오르 중 분화구에 산정호수를 갖춘 곳은 10여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않아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는 ‘물찾오름’이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기간 한시적으로 개방되자 탐방객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열세번째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이 기간 물찾오름 탐방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일환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사전 예약자(20명 내외)에 한해 30분 간격으로 입장이 이뤄졌다.

탐방 프로그램 마지막날인 6일 오전 물찾오름 입구에 탐방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해설사의 강연이 시작됐다. 제주의 오름에서 물찾오름이 차지하는 위상부터 시작해 국립공원 지정, 자연생태학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임도를 정비하고 숲길을 조성했다는 설명이 순식간에 이어졌고, 이후 탐방객들은 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물찾오름 탐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탐방을 마친 뒤 물찾오름 입구에서 만난 한 참가객은 “2년전에 왔을

때는 비가 오고 안개가 짙게 깔리면서 산정호수를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 나뭇가지 사이로 산정호수를 볼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1년에 한번, 행사할때 밖에 보지 못해 아쉽지만, 하루빨리 식생이 복원돼 정상 개방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려니 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에서는 ‘숲속 힐링 명상’ 프로그램도 탐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움직이는 명상으로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강사로는 ‘춤추는 평등부부’ 김봉진·현경희 부부가 참여했다.

강의에 앞서 현 강사는 “명상춤은 마음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는 춤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불복 시대에 꼭 필요한 춤”이라면서 “춤을 어려워하고 몸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강사는 한쪽 발을 들고 난 뒤 발을 살살 털며 명상춤을 이어갔고, 참가객들도 현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본격적으로 춤추는 명상을 이어갔다.



5일 물찾오름에 오른 탐방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행사기간 시선을 모은 숲속 명상 프로그램 모습.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 이모(35)씨는 “20분 가량 숲속에서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며 자연을 느끼니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 사려니 숲 입구에

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서명 홍보 부스가 운영됐는데, 행사장을 찾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나서는 등 COP28의 제주 유치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태윤기자



지하주차장이 폐쇄(사진 왼쪽)되거나 차가 주차돼야 할 공간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해보니...

10곳당 1곳꼴 불법행위

물건적치 등 1658건 적발 형사고발·원상복구 조치

고질적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설 주차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동지역 부설 주차장 1만7891개소(18만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6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동지역 부설 주차장 전체 개소에 9.3%에 이르는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물건적치가 10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용도변경 441건, 출입구 폐쇄 195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부설주차장이 오래돼 주차구획선이 퇴색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이 모호한 사례도 179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을 등재해 매대 제한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고상의 시 차량관리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 및 관계부서와 협조해 부설 주차장 수시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철저한 부설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지원 필요”

교육청-법조계 등 지원 모색

이혼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이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개입,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교육청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

단장, 김선영 전문의 등이 참석한다. 법조계에서는 장창국 부장판사(의정부지법), 박건장 부장판사, 박수진 조사관(제주지법), 의료계에서는 안동현 명예교수(한양대), 문덕수 교수(제주대) 등이 함께 한다.

행정·유관기관에서는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수은 팀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영은 제주시센터장, 이상구 서귀포시센터장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며, 가정의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공무원 수사 확대하라”

선출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금품 살포와 전 이장의 사업 찬성 돌변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선출2리 주민들은 10여건의 고소·고발 및 소송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사당국은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한 당시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찬성을 대가로 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정은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 도정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처리된 제주시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18년 1790건, 2019년 1만2629건, 지난해 1만9641건이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의회는 부결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

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이다. 전라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밀실회의를 진행해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된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 재활 성장클리닉 도수치료 · 면역관리

시설안내 : 80베드 입원실, 80대 주차공간





솔담한방병원
Soldam Hospital of Korean Medicine

진료시간

평일 09:00 ~ 21:00 ★
(점심시간 12:30 ~ 13:30)

주말·공휴일 09:00 ~ 15:00 ★
(점심시간 없음)

휴진 명절연휴 당일 (설, 추석 당일)

064)746-1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관리심의위원회 제201113-중-45586호